

## 제43주년 警友의 날 행사 盛況裡 개최

### - 구홍일 경우회장, 「警·檢 수사권 조정문제 담보

### · 최루장비 사용 금기」현실에 유감 표명 -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재향경우회가 지난 1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구홍일 경우회장, 이택순 경찰청장, 전직 치안총수 및 역대 경우회장, 내외 귀빈, 수도권 거주 경우회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3주년 「경우의 날」 기념 행사를 갖고 조직발전을 결의하는 한편 전·현직 유대강화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경우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하셨고, 은퇴 후에도 경찰지원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 동안 각급회 회장님과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재향경우회는 이제 하나로 뭉쳤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하게 되었다.」고 축하했다.

이후 구 회장은 「금년도에는 조직 활

성화를 위한 일체감 조성을 위해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을 개정 보완 하였고,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경우회의 정체성에 걸맞게 새로운 슬로건(심볼마크)을 제정함과 아울러 해의 예에서도 사용 가능한 현대 감각적인 도안의 신규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국 각급회의 슬로건을 새롭게 제작 배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5월 16일에는 「구국과 호국의 경찰 정신으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생치안을 위해 헌신 노력한 우리 경찰인들의 공적을 인정받아 재향경우회가 가장 의미 있고 큰 賞인 5. 16 민족상 안보부문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그 외에도 경우들의 취업확대 및 조직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사업부문을 확대 개편하여 대방면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세계 속의 경우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9. 17 대표단 19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경우회간의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경우회와 경찰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아시아 지역 경우회의 협업체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임에도, 그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방패만 들고 쇠파이프와 죽봉, 화염병으로 무장한 폭력시위대의 무차

별 공격에 쓰러지는 모습은 바로 국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인데, 폭력시위대와 진압경찰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최루 장비 사용이 금기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인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전·의경 부모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폭력시위장면 사전진시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전·현직 경찰인 모두의 숙원이며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警·檢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성명발표와 경우신문 특집편성 등으로 금번 정기 국회에서 매듭지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음을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라는 남다른 同志의식과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투철한 경찰정신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온 국민의 정성을 받는 막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하며, 전국 모든 경우들의 분발을 호소한다.」고 역설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축사를 통해 「여러 선배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경찰을 떠나신 후에도 ‘영원한 경찰인’으로서, 저희 후배들을 한결같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금 우리 경찰의 발전된 모습이 선배님들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현직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관련 이 청장은 우선적으로 향후 전 치안총수 등이 사망했을때는 예우차원의 일환으로 현직 후배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최석원 제 29대 치안국장도 경우회 및 경찰 발전을 위한 건전한 덕담을 나눠 많은 박수를 받았다.

## 警·檢 수사구조 개혁, 참여정부에서 마무리 돼야!

— 최 응 렬 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6년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경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양측이 성의 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제도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검·경 수사구조 개혁을 경찰의 혁신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낙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검·경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은 2004년 9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 12월부터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였다.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5월 2일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과 검찰 양 기관에서 상정된 26개의 안건을 「민생범죄 등 경찰수사 자율성 보장’, 「고소·고발사건 처리 혁신방안’, 「기타 검·경간 업무의 합리적 개선’,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사항」 등 크게 네 가지 틀로 나누어 논의하였고, 2005년 4월 11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수사절차에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점근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핵심의제인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검·경간 상호협력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최종적인 수사권 조정안은 도출되지 못한 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야의 입법안들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현행의 수사구조를 하루빨리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을 위해서도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찰과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수사를 하면서 겪어서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계속해서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

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이중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액튼(Lord Acton) 경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 두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인권의 보장은 절대독점권력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인 경제와 균형을 원리가 작동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unity of command)에도 위배된다는 점이다.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는 명령·지휘체통의 일원화, 즉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경찰 상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수사담당 경찰관은 혼란을 일으키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마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에 충실한 합리적인 ‘민주분권적 수사구조 개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지휘부를 비롯한 15만 경찰관 모두가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검·경 상호협력관계’를 골자로 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지휘부가 15만 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경찰지휘부가 예전처럼 정치권에 휘둘리고 언론에 이끌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간곡히 간청한다. 현안 과제인 경찰 수사권 독립이 경찰의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라면 경찰지휘부가 모두 사직할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려는 의연하지 못한 지휘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라고 감히 진언한다.



## 국정원 2차장에 한진호 前 서울경찰청장



정부는 최근 국정원 제2차장에 한진호 前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한 차장은 30여년 간 경찰에 몸담으면서 경비와 교통, 정보 분야 등을 두루 거쳤으며, 외무내각 스타

일에 일처리가 합리적이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평이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해 하위 직원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역력 ▲인천(57) ▲재물포고·고려대 ▲경찰 간부후보생 2기 ▲강원 양구서장 ▲서울 101경비단 부단장 ▲서울 서대문서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인천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경찰청장

#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진압경찰 투입반대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시위진압이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 공격당해 쓰러지는 경찰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